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 <목 차>

1. 금융기관 감독분담금 산정방법 등의 변경(안 제3조의 2, 별표1의2, 별표1, 제8조제1항)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정태호
	담당부서 (과)	혁신기획재정담당관		직급	사무관
	국장	유재훈		연락처	02-2100-2782
	과장	진선영		이메일	mofa_2080462@mail.go.kr

2021. 05. 04.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금융기관 감독분담금 산정방법 등의 변경(안 제3조의 2, 별표1의2, 별표1, 제8조제1항)		
	2.규제조문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3.위임법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5.24 ~ 2021.07.0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원의 운영재원은 금융위설치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금감원 검사수검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 및 공모증권 발행기관이 납부하는 발행분담금으로 충당</p> <p><input type="checkbox"/> 그러나, 20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인 개정이 없어서 분담금의 법적 성격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납부기관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는 바 개선 필요</p> <p>①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감독분담금의 법상 검사수수료 성격에도 불구하고 전체 분담금의 40%를 금융영역별 분담능력(영업수익)에 따라 배분하여 법적 성격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함</p> <p>② (금융영역 내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은행, 금투, 보험 등 동일 금융영역 내에서는 세부업종과 무관히 총부채와 영업수익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금융회사별 분담금을 배분</p> <p>- 업종별 감독수요와 분담금 부담액이 비례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 발생</p> <p>③ (감독분담금 면제대상) 금감원 감독,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광범위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독분담금 면제해택을 부여</p> <p>- 분담금의 법상 수수료 원칙에 위배되고 금융회사 간 형평성을 저해</p> <p>④ (추가감독분담금 부과 기준) 금융사고, 재무건전성 악화 등으로 추가검사를 유발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실제 검사투입인원과 무관히 일률적으로 기준분담금 대비 30%의 추가분담금 부과</p> <p>- 검사투입인원 규모에 관계 없이 기준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형 금융회사가 더 많은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므로 분담금의 수수료 원칙에 위배되고 금융회사 간 형평성 저해</p>		
	7.규제내용	<p>(1)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개편(규정 제3조의2제1항)</p> <p>○ 은행/비은행, 금투, 보험 3개 금융영역별에 감독분담금을 배분할 때 금융영역별 금감원 투입인력 가중치를 종전의 60%에서 80%로 확대하고, 금융영역별 영업수익 가중치를 40%에서 20%로 축소</p>		

		<p>(2) 금융영역 내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개편(규정 제3조의2제2항, 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비은행 : 금번 제도개선으로 새롭게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포함되는 업종 중 전자금융업, 부가통신업(VAN), 경영여신업, 신용정보원 등 비금융 경영업종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 기준 분담요율 대신 영업수익기준 분담요율 적용</li> <li>○ 금투 : 자산운용사(집합투자,투자일임, 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60%)+영업수익(40%)' 결합 분담요율 대신 영업수익 단일(100%) 기준 분담요율 적용</li> <li>○ 보험 : 생보사와 손보사에 대하여 기존의 '총부채(70%)+보험료수입(30%)' 결합 분담요율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총부채(50%)+보험료수입(50%)' 기준 분담요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번 제도개선으로 새롭게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으로 포함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수익 단일기준 분담요율 적용</li> </ul> </li> </ul> <p>(3) 분담금 면제대상 기준 강화(규정 별표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면제사유 강화) 분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소형 금융회사의 기준을 종전의 '영업수익 50억 미만'에서 '영업수익 30억 미만'으로 강화</li> <li>○ (면제대상 업종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금감원 감독수요가 없는 업종 : 면제 유지</li> <li>(ii) 영업규모가 영세하거나 금감원 감독수요가 희소한 업종 : 검사건별 감독분담금(100만원) 부과</li> <li>(iii) 영업규모 및 금감원 감독수요가 일정수준 이상인 업종 : 상시 분담금 부과</li> </ul> </li> </ul> <p>(4)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기준 개선(규정 제3조의2제4항, 제5항, 별표1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감독분담금 산출산식 개편) '기준분담금 대비 30%'와 '금감원의 검사투입인력에 연동한 산출금액' 中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li> <li>○ (추가감독분담금 부과요건 관련 용어 정비) 추가감독분담금 부과대상 검사의 요건인 '재무건전성 악화', '금융사고'의 정의를 규정상 명확화하여 금융회사의 규제수범 불확실성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기간이 2개 사업연도에 걸치는 경우 검사 종료연도에 2개 사업연도 검사투입인원을 합쳐서 반영함을 규정상 명확히 함</li> </ul> </li> <li>○ (추가분담금 부과시점과 관련한 특례 마련) 직전사업연도에 검사가 집행되었으나 아직 검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건은 검사결과가 확정되는 연도로 순연하여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도록 함</li> </ul> <p>(5) 감독분담금 차년도 이월근거 정비(규정 제8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전 제도개선으로 신설되는 건별감독분담금의 경우 금융위 승인을 거쳐 환급 없이 차년도로 이월할 수 있음을 규정에 명시함</li> </ul>
--	--	--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금융감독원 검사대상인 약 5,900여개 금융기관 중 면제대상을 제외한 감독분담금 납부대상 금융회사 (21년 기준 494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금융회사(20년말 기준 5983개) 중 감독분담금 면제대상을 제외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21년 기준 494개)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1)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 강화를 통한 금융회사 간 분담금 납부 부담의 형평성 제고  ○ 금융영역 간 및 각 금융영역 내 세부업권 간에 실제 금감원 감독투입량에 보다 상응하는 방식으로 감독분담금이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업권 간 분담금 부담의 형평성 개선 가능  ○ 금감원 감독, 검사서비스가 투입되는 금융회사 및 금융업권은 비록 소량이라도 감독분담금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감독분담금의 법상 수요자부담 원칙을 보다 명확히 구현 가능  (2) 추가감독분담금 금액산출방식의 합리성 강화를 통한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담 완화  ○ 실제 추가검사에 소요된 금감원 인력에 비례하여 추가감독분담금 규모가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추가감독분담금 납부액 부담을 완화 가능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54,756.42	119,159.65	-64,403.23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영향 미미		해당사항 없음
기타	12.일물설정 여부	○ 동 규제는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매회계연도 수입예산 성립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규제일물 설정시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업무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여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규제 성격상 일물설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적용대상 아님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54,756.42	119,159.65	-8,888.21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감독분담금의 산정방법) ① 제3조의 구분에 의한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0.6 \times \text{감독분담금 총액} \times (\frac{\text{해당영역 투입인력}}{\text{투입인력 합계}})] + [0.4 \times \text{감독분담금 총액} \times (\frac{\text{해당영역 영업수익}}{\text{영업수익 합계}})]$	제3조의2(감독분담금의 산정방법) ① 제3조의 구분에 따른 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0.8 \times \text{감독분담금 총액} \times (\frac{\text{해당영역 투입인력}}{\text{투입인력 합계}})] + [0.2 \times \text{감독분담금 총액} \times (\frac{\text{해당영역 영업수익}}{\text{영업수익 합계}})]$
②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금융영역별 분담요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별표1제1호의 금융영역: $\frac{\text{별표1제1호 금융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별표1제1호 금융영역의 총부채 합계}}$ 2. 별표1제2호의 금융영역: 가. 총부채 기준 : $0.6 \times \frac{\text{별표1제2호 금융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별표1제2호 금융영역의 총부채 합계}}$ 나. 영업수익 기준 : $0.4 \times \frac{\text{별표1제2호 금융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별표1제2호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합계}}$ 3. 별표1제3호의 금융영역: 가. 총부채 기준 : $0.7 \times \frac{\text{별표1제3호 금융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별표1제3호 금융영역의 총부채 합계}}$ 나. 보험료수입 기준 : $0.3 \times \frac{\text{별표1제3호 금융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별표1제3호 금융영역의 보험료수입 합계}}$	② 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금융영역별 분담요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별표1제1호의 금융영역 가. 법 제38조제6호에 따른 겸영 여신업자, 별표1제1호나목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같은 호 거목부터 너목까지의 기관 : $\frac{\text{별표1제1호 금융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별표1제1호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합계}}$ 나. 가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 $\frac{\text{별표1제1호 금융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 - \text{가목의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별표1제1호 금융영역의 총부채(가목의 기관은 제외) 합계}}$ 2. 별표1제2호의 금융영역 가. 법 제38조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 : $\frac{\text{별표1제2호 금융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별표1제2호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합계}}$ 나. 가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현행	개정안
<p>③ 검사대상기관별 감독분담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p> <p>1. <u>별표1제1호의 기관 : 제2항제1호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u></p>	<p>(1) <u>총부채 분담요율 :</u></p> $0.6 \times \frac{\text{별표1제2호 금융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 - \text{가목의 기관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별표1제2호 금융영역의 총부채(가목의 기관은 제외) 합계}}$ <p>(2) <u>영업수익 분담요율 :</u></p> $0.4 \times \frac{\text{별표1제2호 금융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 - \text{가목의 기관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별표1제2호 금융영역의 총부채(가목의 기관은 제외) 합계}}$ <p>3. <u>별표1제3호의 금융영역</u></p> <p>가.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u>보험협회, 같은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 :</u></p> $\frac{\text{별표1제3호 금융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별표1제3호 금융영역의 영업수익(나목의 기관은 보험료수입) 합계}}$ <p>나. <u>가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u></p> <p>(1) <u>총부채 분담요율 :</u></p> $0.5 \times \frac{\text{별표1제3호 금융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 - \text{가목의 기관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별표1제3호 금융영역의 총부채(가목의 기관은 제외) 합계}}$ <p>(2) <u>보험료수입 분담요율</u></p> $0.5 \times \frac{\text{별표1제3호 금융영역의 감독분담금 총액} - \text{가목의 기관의 감독분담금 총액}}{\text{별표1제3호 금융영역의 보험료수입(가목의 기관은 제외) 합계}}$ <p>③ -----</p> <p>-----.</p> <p>1. <u>별표1제1호의 검사대상기관</u></p> <p>가. <u>제2항제1호가목의 기관 : 제2항제1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금융부문 영업수익으로 한정</u></p>

현 행	개 정 안
<p>2. <u>별표1제2호의 기관 : (제2항제2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제2항제2호나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u></p> <p>3. <u>별표1제3호의 기관 : (제2항제3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제2항제3호나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보험료수입)</u></p> <p><u>&lt;신 설&gt;</u></p>	<p>다)</p> <p>나. <u>제2항제1호나목의 검사대상기관 : 제2항제1호나목의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u></p> <p>2. <u>별표1제2호의 검사대상기관</u></p> <p>가. <u>제2항제2호가목의 기관 : 제2항제2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u></p> <p>나. <u>제2항제2호나목의 기관 : (총부채 분담요율×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영업수익 분담요율×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u></p> <p>3. <u>별표1제3호의 검사대상기관</u></p> <p>가. <u>제2항제3호가목의 기관 : 제2항제3호가목의 분담요율×해당 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u></p> <p>나. <u>제2항제3호나목의 기관 : (총부채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영업수익)+(보험료수입 분담요율×해당검사대상기관의 보험료수입)</u></p> <p>4. <u>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감독분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검사대상기관이 직전년도에 금감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독분담</u></p>

현 행	개 정 안
<p>④ 원장은 직전사업연도 중 재무 건전성악화,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부문검사에 한한다.) 실시로 검사대상기관의 금융영역별 투입 연인원수가 상위 0.1%(평균+표준편차*3.09)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검사대상 기관별 분담금 총액에 30%를 추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p>	<p><u>금을 100만원으로 한다.</u></p> <p>④ 원장은 직전사업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부문검사에 한한다.) 실시로 인한 검사투입 연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 내 검사실시기관의 상위 0.1%(평균+표준편차*3.09)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제3항에 따른 감독분담금에 [별표1의 2]에 따른 추가분담금을 가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와 통보 및 조치 등 검사결과와 확정여부 이르지 않은 건의 경우에는 검사결과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이연하여 추가분담금을 가산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 지정조치 대상 여부의 파악을 위한 검사</li> <li>2.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검사</li> <li>3.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 발생 여부 및 사고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검사</li> </ol>



현행	개정안
<p><u>&lt;신설&gt;</u></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입인력, 영업수익, 총부채 및 보험료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관의 총부채, 영업수익 및 보험료수입은 포함하지 아니한다.</p> <p>1. ~ 2. (생략)</p> <p>3. 총부채 : 감독원의 예산이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검사대상기관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계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신탁재산은 총부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p> <p>가. ~ 차. (생략)</p>	<p>⑤ 제4항에 따른 검사투입 연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목적의 검사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종료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투입된 검사인원을 모두 합친 인원을 검사투입 연인원수로 본다.</p> <p>⑥ ----- -----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 ----- ----- -----. -----. -----.</p> <p>가. ~ 차. (현행과 같음)</p>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금감원 운영재원의 주된 부분(총수입의 약 75%)은 금감원 검사 수검 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조달(금융위법 §46, §47)

○ 금감원 총예산에서 한은출연금, 발행분담금, 기타잡수입 등 여타 수입을 제외한 잔여 필요재원을 감독분담금으로 징수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금감원 총예산	3,666	3,625	3,556	3,630	3,660
감독분담금	2,921	2,811	2,772	2,788	2,654
비중	79.7%	77.5%	78.0%	76.8%	72.5%

□ 감독분담금은 기본적으로 금감원의 감독·검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하되, 금융회사별 부담능력도 고려하여 배분

① (권역 간 배분) 금융영역별로\* 금감원 투입인력(가중치 60%)과 총 영업수익(가중치 40%)에 비례하여 배분(분담금징수규정 §3의2①)

- \* ① 은행·비은행(시행령 §12①-1호)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 은행지주, 신용정보, 각종 정책금융기관(주금공·캠코·신정원·신보 등)
- ② 금투(시행령 §12①-2호) : 금투업자, 종금, 신평, 자금중개, 펀드평가, 채권평가, 펀드사무관리, 회사형펀드, 자본시장유관기관(거래소·예탁원·증금 등)
- ③ 보험(시행령 §12①-3호) : 생보, 손보, 보험개발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유관단체(보험연수원, 계리사회, 보험대리점협회 등)

$$\text{금융영역별 감독분담금} = \frac{\text{감독분담금 총액}}{\text{총액}} \times \left[ 0.6 \times \frac{\text{해당영역 투입인력}}{\text{전체 투입인력}} + 0.4 \times \frac{\text{해당영역 영업수익}}{\text{전체 영업수익}} \right]$$

#### <권역별 감독분담금 배분현황('20년)>

구분	투입인력비중	영업수익비중		가중평균비중	결정분담액
은행·비은행	48.7%	54.1%	⇒	50.9%	1,418(50.9%)
금투	25.0%	13.6%		20.4%	570(20.4%)
보험	26.3%	32.3%		28.7%	800(28.7%)
합계(%)	-	-		-	2,788(100%)

② (권역 내 배분) 회사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보험영역의 경우 보험료 수입) 규모에 비례하여 배분

- 금융회사별 금감원 감독·검사 투입규모를 나타내는 대용지표로서 총부채(⇒건전성 감독)와 영업수익(⇒영업행위 감독) 사용

※ 단, 은행/비은행의 경우 영업수익의 성격이 상이한 다수업권이 합쳐져 있어 영업수익 지표의 대표성이 높지 않은 바 총부채 단일기준 사용

금융영역	분담요율 산정	
은행·비은행	(총부채 요율)	해당영역 감독분담금 배분액 ÷ 해당영역 총부채
금융투자	(총부채 요율)	$0.6 \times \text{해당영역 감독분담금 배분액} \div \text{해당영역 총부채}$
	(영업수익 요율)	$0.4 \times \text{해당영역 감독분담금 배분액} \div \text{해당영역 영업수익}$
보험	(총부채 요율)	$0.7 \times \text{해당영역 감독분담금 배분액} \div \text{해당영역 총부채}$
	(보험료수입 요율)	$0.3 \times \text{해당영역 감독분담금 배분액} \div \text{해당영역 보험료수입}$

③ (추가감독분담금) 전년도에 ①재무건전성 악화, ②금융사고 등으로 부문검사를 받아 검사투입 연인원수가 권역 내 상위 0.1%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감독분담금을 징수 가능 (분담금 징수규정 §3의2④)

- 추가분담금 징수 여부는 금융위 승인사항이나, 일단 승인할 경우 추가분담금 수준은 상시분담금 대비 30%로 고정

<과거 추가분담금 부과 사례>

- ◇ MG손해보험(`19.12월) : RBC비율이 기준치인 100% 미만으로 하락하여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 확인 위한 부문검사 실시 ⇒ 초과분담금 0.91억원
- ◇ 참저축은행(`16.12월) :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신용공여(상호저축은행법 §37 위반) 소지 확인 위한 부문검사 실시 ⇒ 초과분담금 750만원
- ◇ 삼성증권(`19.12월) : 고객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불이행(실명법 부칙 위반) 확인 위한 부문검사 실시 ⇒ 초과분담금 11.95억원
- ◇ 하나은행/우리은행(`20.12월) : DLF 불완전판매 관련 부문검사 실시 ⇒ 초과분담금 47억원(하나), 46억원(우리)

□ 그러나, 20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인 개정이 없어서 분담금의 법적 성격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납부기관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

① (금융영역 간 분담금 배분기준) 전체 감독분담금의 60%만을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40%는 부담능력(영업수익 비중)에 따라 배분

- 감독분담금을 금감원 검사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규정하는 금융위법\* 취지와 미부합

\* 금융위법 §47(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 금융영역 내 세부업종별 감독업무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 배분기준 적용 → 분담금 수준에 있어서 업종간 형평성 문제 발생

(i) (은행·비은행) 총부채 단일기준을 적용하는 바, 총부채기준 적용이 어려운 非금융점영업종\*은 분담금이 면제돼 반사이익 향유

\* VAN, 전자금융업, 경영여신업, P2P 등 : 금융부문 총부채 분리가 어려움

(ii) (보험) 총부채 가중치(70%)가 큰 현행 산식 하에서는 영업규모나 감독투입 비중이 유사한 손보에 비해 생보의 부담이 과대평가\*

\* 생·손보 간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이 유사하나, 분담금은 생보가 약 2배('20년 기준 생보 540억, 손보 260억) 납부

- 생보와 손보의 보험인수성격 차이\* 때문에 영업규모가 유사할 경우 총부채 규모는 생보가 커지는 속성을 감안하지 못함

\* 생보 : 인수기간 장기, 보험금지급 확률이 낮은 대신 지급보험금(부채) 규모 大  
손보 : 인수기간 단기, 보험금지급 확률이 높은 대신 지급보험금(부채) 규모 小

(iii) (금투) 총부채 가중치(60%)가 큰 현행 산식 하에서는 영업 특성\*상 총부채가 낮은 자산운용사의 분담금 부담이 과소평가\*\*

\* 자산운용사(집합투자, 투자일임)는 통상 영업 과정에서 고유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 총자산 및 총부채 규모가 낮음

\*\* 금감원 금투권역 투입인력의 약 1/3이 자산운용업권에 할당되나, 자산운용업권의 총분담비율은 금투권역 전체의 약 1.5%에 불과

- 실제 감독수요도 영업행위 감독에 편중\*되므로, 건전성 감독의 대응 지표인 총부채 가중치는 자산운용사에 적용하기 부적절

\* NCR(영업용 순자본비율) 규제를 '14년 폐지한 이후 별도로 자산건전성 비율을 관리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위한 최소적립금(운용수탁고 비례)만 관리

③ (분담금 면제 기준) 분담금 부과 면제의 명시적 법적근거가 없음에도 광범위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면제혜택 부여

- 실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에 대한 일률적인 분담금 면제는 수요자분담 원칙에 위배되고 업권 간 형평성 저해
- 일부 업종은 업종 신설 후 규정 미반영\*이나 징수편의\*\* 등 단지 행정적 이유로 부과가 면제되고 있음

\* (예) P2P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 (예) 전자금융업자, 겸영여신업자 : 금융업 재무제표 미분리로 징수액 산출 어려움

<감독분담금 면제업종[분담금징수규정 별표2] 및 면제사유>

금융영역	업종	면제사유
공통 면제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업수익 50억원 미만</li> <li>■ 청산·파산·회생절차, 영업정지중</li> </ul>
은행/비은행	상호금융단위조합	■ 주로 중앙회가 검사하여 금감원 검사수요 낮음
	해외송금	■ 기재부 요청시에만 검사하여 검사수요 낮음
	부가통신업자(VAN사)	■ 금융 재무제표 미분리
	전자금융업자	
	겸영여신업자	
	신용정보원	
	대부금융협회	■ 규모가 영세하며, 금감원 검사수요 낮음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 금감원 검사수요 낮음
금융투자	P2P중개업자	■ 신설 업종
	펀드평가社, 사무관리社 외국환중개	■ 금감원 검사수요 낮음
	클라우드펀딩중개업자	■ 금감원 검사수요 낮음
	PEF 등 투자회사	■ 투자도관체로서 금감원 검사수요 낮음
	REITS, 선박투자회사, CRC 등 개별법상 투자회사	■ 대부분 투자도관체이며, 실질회사인 경우도 금감원 검사수요 낮음
	개별법상 투자회사의 AMC 및 사무수탁회사	■ 금감원 검사수요 낮음
	역외투자자문회사	■ 국내에 영업소가 없어 실질검사 어려움
보험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모가 영세하며, 금감원 검사수요 낮음</li> <li>■ 금융 재무제표 미분리된 경우 상당수</li> </ul>
	보험대리점	
	손해사정사	■ 규모가 영세하며, 금감원 검사수요 낮음
	기타 보험관계단체 (직능별 협회, 보험연수원)	

④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기준) 실제 추가검사에 투입되는 인원규모와 부담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부과요건 관련 불명확성 존재

(i) 검사투입인원과 무관히 '30%의 추가분담금'을 일률적 부과

- 검사투입인원의 미세한 차이(=상위 0.1% 해당여부)에 따라 분담금 부담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예시] 5대 시중은행에 금융사고 발생시 부문검사 투입인원이 340명일 경우 약 153억원\*, 341명\*\*일 경우 약 199억원 부담 ('19년 기준)

\* '19년 기준 5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NH) 평균 기준분담금은 153억

\*\* '19년 기준 은행·비은행 검사투입인원 상위 0.1% 기준치는 341명

- 검사투입인력이 동일하더라도 상시분담금이 높은 대형회사가 더 많은 추가분담금을 부담해야 해 금융회사 간 형평성 저해

[예시] A은행(상시분담금 167억)과 B저축은행(상시분담금 4억)에 각각 금융사고로 검사역 350명이 투입된 경우, A은행은 50억원, B저축은행은 1.2억원 부담

(ii) 추가분담금 부과요건과 관련한 용어의 불명확성 존재

- '재무건전성 악화' 및 '금융사고'에 대한 정의조항 부재

※ 최초 추가분담금 부과('16.12월)시 금융위가 정한 판단기준\*을 규정처럼 적용

\* ① 재무건전성 악화 : 금산법(§10)상 적기시정조치 대상여부 파악 등

② 금융사고 : 검사제재규정(§41)상 금융사고, 전금법상 전산사고(규정 §73) 등

- '검사투입인원'의 계산기준 불완전\*

\* 금감원 검사가 2개 사업연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경우, 검사인원을 합쳐서 계산할지 사업연도별로 별도로 계산할지 불명확

⇒ 추가분담금의 침익적 성격을 감안할 때, 법령에 부과조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비교

####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감독분담금 부과체계 유지
	내용	<p>①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3개 금융영역 간 분담금 배분기준을 '금감원 투입인원 가중치 60% + 영역별 영업수익 가중치 40%'로 유지</p> <p>②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을 현행 유지</p> <p>(i) (은행·비은행) 총부채 가중치 100%</p> <p>(ii) (금투) 총부채 가중치 60% + 영업수익 가중치 40%</p> <p>(iii) (보험) 총부채 가중치 70% + 보험료수입 가중치 30%</p> <p>③ 분담금 면제대상을 현행대로 유지</p> <p>④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금액을 '기준분담금 대비 30%'로 유지</p>
규제대안1	대안명	부과체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업권 간 형평성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가중치 조정
	내용	<p>①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3개 금융영역 간 분담금 배분기준을 '금감원 투입인원 가중치 80% + 영역별 영업수익 가중치 20%'로 개편</p> <p>②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 개편</p> <p>(i) (은행·비은행) 총부채 가중치 100% 유지(기본)</p> <p>- 단, 신규부과 업종 중 비금융겸영업종(전금 등)은 영업수익 가중치 100% 적용</p> <p>(ii) (금투) 자산운용사와 기타업권(증권 등)을 이원화</p> <p>- 자산운용사는 영업수익 가중치 100% 적용</p> <p>- 증권 등 기타업종은 종전대로 총부채 가중치 60% + 영업수익 가중치 40% 유지</p> <p>(iii) (보험)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 기타업종을 이원화</p> <p>- 생·손보는 총부채가중치 50% + 보험료수입 가중치 50% 적용(2개년간 단계적 적용*)</p> <p>* 23년 : 총부채가중치 60% + 보험료수입가중치 40%</p> <p>24년 이후 : 총부채가중치 50% + 보험료수입가중치 50%</p>



- 보험대리점에 영업수익 가중치 100%를 적용하여 감독분담금을 신규부과(3개년간 단계적 적용\*)
- \* 23년 : 총영업수익 중 50%에 대해서만 분담금 부과
- 24년 : 총영업수익 중 75%에 대해서만 분담금 부과
- 25년 이후 : 총영업수익 전체에 대해서 분담금 부과

### ③ 분담금 면제대상 축소

- (i) 공통면제기준 : 영업수익 50억 미만 → 영업수익 30억 미만으로 강화
- (ii) 업권별 면제기준
  -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만 면제 유지
  - 규모가 영세하거나 감독수요가 희소한 업권은 건별분담금(100만원) 도입
  - 규모와 감독수요가 일정수준 이상인 업권은 상시분담금 부과

### ④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기준 개편

#### (i) 부과산식 개편

개선 산식	
①, ② 中 작은 금액	
①	기준분담금 × 30% (기존산식)
②	$\frac{(\text{해당검사 투입인원} - \text{해당영역 상위 0.1\% 기준 투입인원})(=B)}{\text{해당영역 총 검사투입 인원}(=A)}$ $\times \text{해당영역 총 감독분담금}$ $+ \text{기본추가분담금}(\text{기준분담금} \times 10\%)$

#### (ii) 부과요건 관련 용어의 불명확성 해소

- '재무건전성 악화'의 정의 명확화 : 금융산업법 (§10)상 적기시정조치 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검사
- '금융사고'의 정의 명확화 : '검사제재규정상(규정 §41, 시행세칙 §67) 금융사고' 및 '전자금융감독 규정상(§73)상 전산사고'

#### (iii) 검사 투입인원 산정기준 특례 마련

- 검사기간이 2개 사업연도에 걸치는 경우, 검사 종료연도에 검사투입인원을 합쳐서 반영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lt;적용 예시&gt; ◇ 검사기간 : '20.10.1~'21.2.28</p> <p>◇ 검사투입인원 : '20년 총 250명, '21년 총 250명</p> <p>⇒ '21년도에 500명이 투입된 것으로 계산</p> </div>
규제대안2	대안명	금융영역의 구분방식 등 부과체계의 기본틀 개편
	내용	<p>① 금융영역을 은행, 여전, 저축은행, 증권, 자산운용, 생보, 손보 등 개별 금융업권별로 세분화</p> <p>- 분담금 배분가중치는 금융업권별 금감원 투입 인력을 100% 적용</p> <p>②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 개편</p> <p>(i)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 : 총부채 가중치 100% 유지하되 권역분리</p> <p>(ii) 증권 : 총부채 60% + 영업수익 40% 유지</p> <p>(iii) 자산운용 : 자산운용수탁고 가중치 100%</p> <p>(iv) 생보, 손보 : 총부채 70% + 보험료수입 30% 유지하되 권역분리</p> <p>(v) 기타권역 : 영업수익 가중치 100%</p> <p>③ 분담금 면제대상 축소 : 대안1과 동일</p> <p>④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기준 개편 : 대안 1과 동일</p>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분담금 납부대상기관의 경제적 편익에 변동이 없는 바 법적안정성 유지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분담금의 상당부분을 감독 투입비중이 아닌 납부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현상이 지속돼 감독분담금의 법적 취지를 구현하지 못함</li> <li>○ 금융업종별로 분담금 납부비중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li> <li>○ 명시적 법적 근거 없이 광범위한 업종에 대해 분담금을 면제하는 문제가 지속</li> <li>○ 추가감독분담금을 실제 투입된 감독인력과 무관히 대형사가 많이 부담해 형평성이 저해</li> </ul>

규제대안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영역별 분담금 배분시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을 보다 많이 고려하게 돼 감독분담금의 법적 취지 구현</li> <li>○ 금융영역 내 세부업종 간 감독 투입 비중을 반영하여 산식을 개선함으로써 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li> <li>○ 감독분담금 면제대상을 축소하여 분담금의 법상 수요자 부담원칙을 보다 명확히 구현</li> <li>○ 추가감독분담금을 실제 추가 검사에 소요된 인원에 비례하여 산출함으로써 금융회사 간 형평성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권 간 형평성이 일부 개선되나, 분담금의 수수료 원칙을 온전히 구현하지는 못하는 한계</li> <li>- 감독투입인력 비중과 분담금 납부 비중이 완전히 일치하지 못함</li> </ul>
규제대안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권역을 세부 금융업종별로 세분화함으로써 금융업종별 감독투입수요에 온전히 비례하도록 분담금 납부액을 조정</li> <li>- 금융업권 간 부담액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개선 가능</li> <li>○ 여타 장점은 규제대안1과 동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과 비교하여 금융업종별 분담금 납부액이 크게 변동하여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는 문제</li> <li>- 일부 금융업권(손보, 자산운용)의 부담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규제 수용성이 저해될 여지</li> </ul>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업권 분담요율과 관련하여 생보협회는 보험료수입 단일가중치(100%)안을, 손보협회는 현행안 유지(총부채가중치 70%, 보험료수입 가중치 30%)를 주장</li> <li>⇒ 그간 생보가 과도한 부담을 해 온 점을 근거로 손보협회의 양보를 얻어내 조정안 도출</li> </ul>	총부채가중치 50%, 보험료수입 가중치 50%로 생·손보 간 합의
보험대리점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대리점협회는 감독분담금을 신규 부과에 동의하였으나, 업계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적용요구</li> <li>⇒ 3개년(23~25년)에 걸쳐 단계적 적용*토록 함</li> <li>* 23년 : 영업수익의 50%에만 분담금 부과</li> <li>* 24년 : 영업수익의 75%에만 분담금 부과</li> <li>* 25년~ : 영업수익 100%에 분담금 부과</li> </ul>	단계적 적용안으로 업계 합의
핀테크산업협회, VAN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독분담금 신규 부과에 동의하였으나, 부과대상 영업수익에서 비금융업무 수익* 제외 요청</li> <li>* POS기기판매, 유통사업, 지역화폐 위탁운영 등</li> <li>⇒ 업계 의견을 수용하여 반영기로 함</li> </ul>	비금융영업 관련 영업수익에는 분담금 미부과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사의 부담증가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음	원안대로 유지
은행연합회 등 기타 금속권 협회	○전 금융권 공청회(4.29) 개최를 통해 제도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일부 업권에서 중장기 개선과제를 언급하였으나 금번 제도개선 관련하여 별도 의견제출은 없었음 - 은행 : 총부채 제외대상 확대 필요 - 농협중앙회 : 상호금융개별조합에 대한 금감원 검사기준 명확히 할 필요	원안대로 유지

###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대안1을 선택할 경우 당초 의도한 규제목표를 대부분 달성하면서  
규제에 따른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바,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규제편익)

##### (i)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의 형평성 개선

- 전체 감독분담금의 80%를 은행·비은행/금투/보험 영역에 각각  
전담 투입된 금감원 인원에 비례하여 배분함에 따라 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이 보다 강화되고 업권 간 형평성이 개선됨

※ 단,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전체 감독분담금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바 3개 영역 모두 분담금 납부액이 감소

####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액 변화 효과>

권역	현행('20년 기준)			개선			증감
	투입인력 (가중치60%)	영업수익 (가중치40%)	합계	투입인력 (가중치80%)	영업수익 (가중치20%)	합계	
은행 · 비은행	48.7% (815억)	54.1% (603억)	50.9% (1,418억원)	51.7% (1,115억)	54.1% (292억)	52.2% (1,407억원)	△11억원
금투	25.0% (418억)	13.6% (152억)	20.4% (570억원)	20.4%* (439억)	13.6% (73억)	19.0% (512억원)	△58억원
보험	26.3% (440억)	32.3% (360억)	28.7% (800억원)	27.9% (601억)	32.3% (174억)	28.8% (776억원)	△24억원
합계	1,673억	1,115억	2,788억	2,155억	539억	2,694억	△94억원

\* 금감원 조직개편에 따른 금투영역 전담인력 감소효과 반영(은행, 보험 전담인력 비중은 증가)

\*\*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시행령 개정사항) 효과로 전업권 부담액이 공통 감소하는 효과 발생

(ii) 금융영역 내 세부업종 간 감독분담금 부과의 형평성 개선

- (보험영역) 그동안 감독투입량 대비 과도한 분담금을 부담하던 생보사 부담을 줄이고 손보사 부담액을 늘림으로써 형평성 개선

⇒ 개선 기준 적용시 생보사 부담은 약 △73억원(540억→467억) 감소, 손보사 부담은 약 +24억원(260억→284억) 증가하여 생·손보간 분담 비중이 68:32에서 62:38로 개선

<참고 : 연도별 보험영역 분담금 배분구조 변경 추정치>

구분	현행	'23년	'24년	'25년
생보	540	495(△45)	471(△69)	467(△73)
손보	260	268(+8)	286(+26)	284(+24)
법인보험대리점	0	11.9(+11.9)	17.8(+17.8)	23.8(+25)
기타	0	1.0(+1)	1.0(+1)	1.0(+1)
합계*	800	776(△24)	776(△24)	776(△24)

\* 분담금 환급기준 개선(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른 보험영역 앞 추가환급효과 24억원 반영

- (금투영역) 그동안 감독투입량 대비 작은 금액을 부담하던 자산운용사 부담액을 늘리고 증권사 등의 부담은 낮춰 형평성 개선

⇒ 개선 기준 적용시 자산운용사 부담액은 약 +8.3억원 증가(7.6억→15.9억), 증권사 부담액은 약 △65억원 감소(531억→466억)

(iii) 분담금 면제대상 축소를 통한 수요자분담 원칙 구현

- 금감원 감독수요가 투입되는 업권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분담 원칙을 구현하고 기존 납부업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

(iv) 추가감독분담금 부담액 축소 및 금융회사 간 부과형평성 개선

- 실제 추가점사에 투입된 인원에 비례하여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준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형사가 일률적으로 큰 금액을 부담하던 기존 방식의 문제점 개선
- 납부액의 절대적인 크기도 기존 산식대비 감소\*

\* 최근 2개년 부과사례에 개선산식 대입시 합산부과액이 105.7→51.3억으로 감소

<추가분담금 산출기준 개선효과 예시 (※ 기납부 금융회사 Case에 적용)>

회사명	검사 투입인원	상위 0.1% 기준인원	해당영역 총투입*	해당영역 분담금	부과액 (기존방식)	부과액 (개선방식)
S증권('19년)	194명	159명	2,756명	534억	11.9억	10.8억
M손보('19년)	362명	339명	2,829명	777억	0.9억	0.9억
H은행('20년)	365명	341명	6,488명	1,418억	46.9억	20.8억
W은행('20년)	357명	341명	6,488명	1,418억	46.0억	18.8억

- (규제비용) 기존에 감독분담금을 면제받거나 과소분담하던 업권들의 부담액이 일부 증가

<감독분담금 증가업권 및 업권별 증가폭 예상치>

업종	부과금액(억원)			부과대상 회사수 <sup>1)</sup> (개)	1사당 부담액(만원)	부담액 /영업수익
	기존	개선	증가폭			
손해보험	259.6	284.1	+24.5	31	91,645	0.028%
자산운용	7.6	15.9	+8.3	137	1,160	0.037%
보험대리점(중대형)	0	23.8	23.8	123	1,934	0.036%
VAN	0	12.6	12.6	18	7,001	0.040%
전금	0	22.2	22.2	56	3,962	0.040%
클라우드펀딩	0	0.01	0.01	1	147	0.009%

1) 영업수익 30억원 미만으로서 분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회사를 제외

- 그러나, 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부담액 증가를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금융회사별 부담액은 대체로 감내 가능한 수준\*

\* (예) 보험대리점 : 영업수익 1억원 대비 감독분담금 3.6만원 납부

- 특히, 감독투입량에 비례하여 부과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대안<sup>2)</sup>에 비해서는 부담액 증가폭이 훨씬 낮아 규제수용성이 높음

\* (예) 생보/손보, 증권/자산운용을 권역분리하고 투입인원에 비례하여 분담금을 할당할 경우, 손보사 부담액은 411억원(+152억원), 자산운용사 부담액은 186억원(+178억원)으로 현행 대비 급격히 증가

### 3. 규제목표

#### ①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의 형평성 개선

- 감독분담금을 금융영역별로 투입된 금감원 인원에 비례하여 배분함으로써 감독분담금의 법상 수수료 성격을 보다 명확히 구현

## ② 금융영역 내 세부업종 간 감독분담금 부과의 형평성 개선

- 금융업종별 금감원 감독업무 특성에 따라 분담요율 산출기준을 합리화하여 업권별 분담금 납부금액의 형평성 개선

## ③ 분담금 면제대상 축소를 통한 수요자분담 원칙 구현

- 금감원 감독수요가 투입되는 업권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분담 원칙을 구현하고 기존 납부 업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

## ④ 추가감독분담금 부담액 축소 및 금융회사 간 부과형평성 개선

- 실제 추가감사에 투입된 인원에 비례하여 추가분담금 납부액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 간 부과액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 금융회사의 과도한 부담 완화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규제목적 1~3 :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간 형평성 제고)

- (규제수단) 분담금 납부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부과 권역의 전면개편\*이라는 급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대신, 기존의 부과권역을 유지하면서 부과산식만 조정하는 핀포인트 규제를 채택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금번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한국금융학회)을 수행(19년)한 바 있으며, 동 연구용역은 "생보와 손보는 부채의 성격이 다른 바 권역을 분리하여 별도로 분담금을 산출"하도록 권고

- (비례적 타당성 평가) 규제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로 규제의 영향력을 최소화한 바, 규제목적과 규제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

□ (규제목적 4 : 추가분담금 부담액 축소 및 부과형평성 개선)

- (규제수단) 실제 추가검사 투입인원과 무관히 **과중한 정률부담금** (상시분담금 대비 30%)를 부과하던 기존 규제를 대체하여,
  - 추가분담금을 유지하되 **부과규모**는 실제 검사투입인원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규제수준을 완화**
- (비례적 타당성 평가) 금융사고로 검사인력 소모를 유발한 금융회사에 대한 패널티라는 기존의 규제목적은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영향력은 **최소화**한 바, 규제목적과 규제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을 충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사항 없음	영향 미미	해당사항 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금융업종별로 부담하는 감독분담금 규모가 달라져서 업권 간에 유불리가 발생하나, 경쟁대상인 동종업권 내 금융회사 간에는 금번 규제로 인한 영향이 동일하므로 금융회사 간 경쟁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음

- 중기영향평가

- 이미 영업수익(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독분담금을 면제하거나 소액만 부과하도록 중소기업 특례\*를 운영하고 있는 바, 추가로 중기영향평가 및 규제차등화 예비분석을 실시할 실익이 없음



- \* ① '영업수익(매출액) 규모'가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감독분담금을 면제
- ②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상시감독분담금 대신 검사건당 100만원의 건별감독분담금만 부과

##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이미 금융업 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수행하고 그 반대급부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서 경쟁·진입 제한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 일몰설정 여부

- 감독분담금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매회계연도 수입예산 성립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분담금 제도에 대하여 규제일몰 설정시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업무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하여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일몰 설정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동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한 규제가 아닌 바 해당사항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동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한 규제가 아닌 바 해당사항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동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한 규제가 아닌 바 해당사항 없음
사후 평가관리		동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한 규제가 아닌 바 해당사항 없음
규제 샌드박스		이미 정식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독 분담금과 관련한 규제이므로 신규 시장진입 추진자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적용과는 무관함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 (분담금 납부권역의 구분) 한국의 경우 금융영역을 크게 은행, 금융투자, 보험의 3개 대권역으로 나누는 반면(시행령 §12), 영국·호주·독일 등 여타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금융영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

\* (예) 영국 FCA : 총 24개(보험 내 생보/손보, 금투 내 증권/자산운용 구분)  
독일 Bafin : 총 6개(자산운용을 별도업권 구분, 증권(IB)은 은행(CB)과 통합)  
호주 APRA : 총 8개(보험 내 생보/손보/연금 구분, 자산운용(신탁, 기금) 구분)

- 각 권역 간의 감독분담금 배분은 대체로 권역별 감독투입인력 비중 (가중치 100%)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

⇒ 이는 각 금융업권별 감독당국 투입인력에 따라 분담금 납부금액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규제개선 취지인 ‘금융업권 간 분담형평성 제고’는 해외 감독당국의 정책목표와도 부합

- (권역별 분담요율 산출기준) 한국처럼 전 금융업권에 비교적 정형화된 기준으로 부과체계를 통일하는 사례(예: 호주 APRA, 총부채)도 있으나,

- 금융업권별 감독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분담금 부과기준을 혼용하는 사례\*도 존재

\* (예 : 영국 FCA) 수신기관은 총부채, 대출기관은 대출취급량, 증권사는 증권거래량, 자산운용사는 운용수탁고 등 업권별 감독특성에 따라 지표 차별화

⇒ 주요국의 경우 금융권역을 세분화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회사끼리 권역을 이루기 때문에, 권역 내 분담요율 산출기준 변화에 따른 회사별 영향이 한국에 비해 크지 않음(중장기적으로 한국도 유사개편 필요)

<참고 : 주요국 금융감독기구별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비교>

구분	권역 간 분담금배분	권역 내 분담금배분
영국 FCA (영업행위 통합감독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영역을 총 24개로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여수신 관련 : 예금취급기관, 주택금융기관, 소비자신용기관 등</li> <li>(ii) 보험 관련 : 일반보험사, 생명보험사, 보험증권 발행사, 보험중개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신기관) 총부채</li> <li>■ (대출기관) 대출취급량</li> <li>■ (투자매매) 거래량</li> </ul>

구분	권역 간 분담금배분	권역 내 분담금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ii) 금융투자 관련 : 투자매매·중개·기업금융, 투자신탁·투자회사·자산신탁</li> <li>■ 영역별로 감독인력 투입비중에 따라 분담금 배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운용) 운용수탁고</li> <li>■ (생보) 보험료(75%)+총부채(25%)</li> <li>■ (손보) 보험료(90%)+총부채(10%)</li> </ul>
영국 PRA (건전성 감독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영역을 총 6개로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생보, 손보, Lloyd 계열보험사, Lloyd 본사, 투자은행(SIFI)</li> <li>※ SIFI를 제외한 금투회사는 FCA 소관</li> </ul> </li> <li>■ 영역별 감독인력 투입비중에 따라 분담금 배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총부채</li> <li>■ (생보) 보험료(75%)+총부채(25%)</li> <li>■ (손보) 보험료(90%)+총부채(10%)</li> <li>■ (투자은행) 총자산(50%)+영업수익(50%)</li> </ul>
호주 APRA (건전성 감독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영역을 총 8개로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지주, 생보, 손보, 연금보험, 민영건강보험, 신탁, 기금</li> <li>※ 금투회사는 ASIC(영업행위감독기구) 소관</li> </ul> </li> <li>■ 영역별 감독인력 투입비중(기관감독/시스템감독 구분)에 따라 분담금 배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권역 공통) 총자산</li> </ul>
독일 Bafin (통합감독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영역을 크게 6개로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CB+IB), 보험, 자산운용, 정리금융, 신용정보, 팩토링·리스</li> <li>※ 최소분담금을 내는 기타수검기관 별도존재</li> </ul> </li> <li>■ 영역별 감독인력 투입비중에 따라 분담금 배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은행) 총자산</li> <li>■ (보험) 총보험료수입</li> <li>■ (자산운용) 운용수탁고</li> </ul>

## ○ 타법사례

특이사항 없음

####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부과체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업권 간 형평성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가중치 조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64,403.23백만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부과체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업권 간 형평성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가중치 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54,756.42	119,159.65	-64,403.2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54,756.42	119,159.65	-64,403.23
기업순비용		-64,403.23	연간균등순비용	-8,888.21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 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기존에 감독분담금을 면제받거나 과소분담하던 일부 업권들의 부담액이 다소 증가하나,

<감독분담금 증가업권 및 업권별 증가폭 예상치>

업종	부과금액(억원)			부과대상 회사수 <sup>1)</sup> (개)	1사당 부담액(만원)	부담액 /영업수익
	기존	개선	증가폭			
손해보험	259.6	284.1	+24.5	31	91,645	0.028%
자산운용	7.6	15.9	+8.3	137	1,160	0.037%
보험대리점(중대형)	0	23.8	23.8	123	1,934	0.036%
VAN	0	12.6	12.6	18	7,001	0.040%
전금	0	22.2	22.2	56	3,962	0.040%
크라우드펀딩	0	0.01	0.01	1	147	0.009%

1) 영업수익 30억원 미만으로서 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 회사를 제외

- 업계 부담을 고려하여 부담액 증가를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금융회사별 부담액은 수익규모 대비 감내 가능한 수준\*

\* (예) 보험대리점 : 영업수익 1억원 대비 감독분담금 3.6만원 납부

⇒ 규제대상 금융회사들이 감독분담금 납부의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초 금융기관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확인하여 금융기관별 감독분담금 납부액을 산정하고 집행하고 있으므로 안정적 집행이 가능

##### ○ 재정적 집행가능성

- 동 규제집행을 위해 별도의 물리적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행정업무만으로 규제집행이 가능함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19.2월~12월, 한국금융학회)

☐ 연구용역 결과 도출 및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의('20.7월, '21.3월)

\* 분담금관리위원회(금융위법 §47②) : 금감원 분담금 요율결정 및 제도개선 심의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심의기구

☐ 제도개선 실무안 마련 및 쟁점업권 실무협의('21.3~4월)

☐ 전업권 대상 공청회 실시('21.4.29일)

☐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1.5월)

### 2. 향후 평가계획

☐ 금융위원회는 매회계연도 금융감독원 예산심의시 감독분담금 수입 예산을 심의하면서 업권별 분담금 부과수준의 적정성을 심의할 계획

○ 심의 과정에서 금융회사 간 또는 업권 간 부담수준 및 부과방식의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3. 종합결론

☐ 금번 분담금 제도개선은 분담금 납부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분담금 징수의 법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 국회·감사원 및 금융업계에서 장기간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규제개선의 시급성이 높은 반면,

○ 규제개선에 따른 비용은 미미한 수준이므로 원안대로 추진할 필요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부과체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업권 간 형평성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가중치 조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54,756.42	119,159.65	-64,403.2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54,756.42	119,159.65	-64,403.23	
기업순비용		-64,403.23	연간균등순비용	-8,888.21	

##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부과체계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업권 간 형평성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가중치 조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손해보험업계																																	
활동제목	감독분담금 부과액 증가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16,155,828,976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div>○ 보험업권 내 감독분담금 부과산식 개편안*을 2020년 현재의 생보 및 손보업계 총부채 및 보험료수입 통계에 대입하면,</div> <div>* (현행) 생손보 : 총부채가중치 70%, 보험료수입 가중치 30%</div> <div>기타업권 : 면제</div> <div>(23년) 생손보 : 총부채가중치 60%, 보험료수입 가중치 40%</div> <div>법인보험대리점 : 영업수익가중치 100%(총영업수익의 50%만 반영)</div> <div>(24년) 생손보 : 총부채가중치 50%, 보험료수입 가중치 50%</div> <div>법인보험대리점 : 영업수익가중치 100%(영업수익의 75%만 반영)</div> <div>(25년 이후) 생손보 : 총부채가중치 50%, 보험료수입 가중치 50%</div> <div>법인보험대리점 : 영업수익가중치 100%(영업수익 전액 반영)</div> <div>- 손보업계의 감독분담금 부담액은 현행과 비교해 '23년에 약 8억원, '24년에 약 26억원, '25년 이후 약 24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div>																																	
근거설명	<div>&lt;참고 : 연도별 보험영역 분담금 배분구조 변경 추정치&gt;</div> <table><tr><th>구분</th><th>현행</th><th>'23년</th><th>'24년</th><th>'25년</th></tr><tr><td>생보</td><td>540</td><td>495(△45)</td><td>471(△69)</td><td>467(△73)</td></tr><tr><td>손보</td><td>260</td><td>268(+8)</td><td>286(+26)</td><td>284(+24)</td></tr><tr><td>법인보험대리점</td><td>0</td><td>11.9(+11.9)</td><td>17.8(+17.8)</td><td>23.8(+25)</td></tr><tr><td>기타</td><td>0</td><td>1.0(+1)</td><td>1.0(+1)</td><td>1.0(+1)</td></tr><tr><td>합계*</td><td>800</td><td>776(△24)</td><td>776(△24)</td><td>776(△24)</td></tr></table> <div>* 분담금 환급기준 개선에 따른 보험영역 앞 추가환급효과 24억원 반영</div>				구분	현행	'23년	'24년	'25년	생보	540	495(△45)	471(△69)	467(△73)	손보	260	268(+8)	286(+26)	284(+24)	법인보험대리점	0	11.9(+11.9)	17.8(+17.8)	23.8(+25)	기타	0	1.0(+1)	1.0(+1)	1.0(+1)	합계*	800	776(△24)	776(△24)	776(△24)
구분	현행	'23년	'24년	'25년																														
생보	540	495(△45)	471(△69)	467(△73)																														
손보	260	268(+8)	286(+26)	284(+24)																														
법인보험대리점	0	11.9(+11.9)	17.8(+17.8)	23.8(+25)																														
기타	0	1.0(+1)	1.0(+1)	1.0(+1)																														
합계*	800	776(△24)	776(△24)	776(△24)																														

(정량)세분류	중대형(법인) 보험대리점업계
활동제목	감독분담금 부담 신설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15,703,536,053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div><div><input type="checkbox"/> 보험업권 내 분담금 배분산식 개편에 따라 '23년부터 법인 보험대리점(GA) 업계의 감독분담금 부담액이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승하게 됨</div><div><div>* ① 23년 : (GA 영업수익합계*0.5 / 보험업권 전체 영업수익합계) × 보험업권 전체 감독분담금 = 약 11.9억원</div><div>② 24년 : (GA 영업수익합계*0.75 / 보험업권 전체 영업수익합계) × 보험업권 전체 감독분담금 = 약 17.85억원</div><div>③ 25년 이후 : (GA 영업수익합계 / 보험업권 전체 영업수익합계) × 보험업권 전체 감독분담금 = 약 23.8억원</div></div></div>																														
근거설명	<div><div>&lt;참고 : 연도별 보험영역 분담금 배분구조 변경 추정치&gt;</div><table><tr><th>구분</th><th>현행</th><th>'23년</th><th>'24년</th><th>'25년</th></tr><tr><td>생보</td><td>540</td><td>495(△45)</td><td>471(△69)</td><td>467(△73)</td></tr><tr><td>손보</td><td>260</td><td>268(+8)</td><td>286(+26)</td><td>284(+24)</td></tr><tr><td>법인보험대리점</td><td>0</td><td>11.9(+11.9)</td><td>17.8(+17.8)</td><td>23.8(+25)</td></tr><tr><td>기타</td><td>0</td><td>1.0(+1)</td><td>1.0(+1)</td><td>1.0(+1)</td></tr><tr><td>합계*</td><td>800</td><td>776(△24)</td><td>776(△24)</td><td>776(△24)</td></tr></table><div><div>* 분담금 환급기준 개선에 따른 보험영역 앞 추가환급효과 24억원 반영</div></div></div>	구분	현행	'23년	'24년	'25년	생보	540	495(△45)	471(△69)	467(△73)	손보	260	268(+8)	286(+26)	284(+24)	법인보험대리점	0	11.9(+11.9)	17.8(+17.8)	23.8(+25)	기타	0	1.0(+1)	1.0(+1)	1.0(+1)	합계*	800	776(△24)	776(△24)	776(△24)
구분	현행	'23년	'24년	'25년																											
생보	540	495(△45)	471(△69)	467(△73)																											
손보	260	268(+8)	286(+26)	284(+24)																											
법인보험대리점	0	11.9(+11.9)	17.8(+17.8)	23.8(+25)																											
기타	0	1.0(+1)	1.0(+1)	1.0(+1)																											
합계*	800	776(△24)	776(△24)	776(△24)																											

(정량)세분류	자산운용업계				
활동제목	감독분담금 부담액 증가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6,014,107,815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도별 감독분담금 부담액 증가액(8300000000)				
근거설명	<p><input type="checkbox"/> 금투영역 중 자산운용업계(집합투자·투자일임·자문업자)에 대해서는 총부채 기준을 배제하고 '영업수익 단일 기준 (100%) 분담요율' 적용</p> <p>&lt;금투영역 중 자산운용사 감독분담금 산식 변화&gt;</p> <table border="1"> <thead> <tr> <th>현행</th><th>변경</th></tr> </thead> <tbody> <tr> <td> <math display="block">0.6 \times \text{금투영역 분담금} \times \frac{\text{해당회사총부채}}{\text{금투영역총부채}} + 0.4 \times \text{금투영역 분담금} \times \frac{\text{해당회사영업수익}}{\text{금투영역총영업수익}}</math> </td><td> <math display="block">\text{금투영역 분담금} \times \frac{\text{해당회사영업수익}}{\text{금투영역총영업수익}}</math> </td></tr> </tbody> </table>	현행	변경	$0.6 \times \text{금투영역 분담금} \times \frac{\text{해당회사총부채}}{\text{금투영역총부채}} + 0.4 \times \text{금투영역 분담금} \times \frac{\text{해당회사영업수익}}{\text{금투영역총영업수익}}$	$\text{금투영역 분담금} \times \frac{\text{해당회사영업수익}}{\text{금투영역총영업수익}}$
현행	변경				
$0.6 \times \text{금투영역 분담금} \times \frac{\text{해당회사총부채}}{\text{금투영역총부채}} + 0.4 \times \text{금투영역 분담금} \times \frac{\text{해당회사영업수익}}{\text{금투영역총영업수익}}$	$\text{금투영역 분담금} \times \frac{\text{해당회사영업수익}}{\text{금투영역총영업수익}}$				

	<p>- 개정안 적용시 자산운용사 총 감독분담금 부담액은 7.6억원 → 15.9억원으로 소폭 증가</p>
--	--

(정량)세분류	부가통신업자(VAN) 및 전자금융업자
활동제목	감독분담금 부담 신설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16,882,977,36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도별 감독분담금 부담액(2330000000)
근거설명	<p><input type="checkbox"/> (부가통신업자) 2023년부터 부가통신업자의 금융부문 총영업수익 규모에 비례*하여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는 바,</p> <p>* 부과산식 : (부가통신업자 금융부문 영업수익 합계 / 은행 · 비은행 전체 총영업수익) × 은행 · 비은행 총 감독분담금 = 약 12.6억원</p> <p>○ 2020년도 기준 은행 · 비은행업권 총영업수익 대비 부가통신업자의 금융부문 총영업수익 비중이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향후 10년간의 감독분담금 부담액을 추정함</p>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업자) 2023년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금융부문 총영업수익 규모에 비례*하여 감독분담금을 부과하는 바,</p> <p>* 부과산식 : (전자금융업자 금융부문 영업수익 합계 / 은행 · 비은행 전체 총영업수익) × 은행 · 비은행 총 감독분담금 = 약 22.2억원</p> <p>○ 2020년도 기준 은행 · 비은행업권 총영업수익 대비 전자금융업자의 금융부문 총영업수익 비중이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향후 10년간의 감독분담금 부담액을 추정함</p>

☐ 직접편익

(정량)세분류	생명보험업계
활동제목	감독분담금 부담액 감소
편익항목	행정부담 감소
비용	50,106,110,093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p>○ 보험업권 내 감독분담금 부과산식 개편안*을 2020년 현재의 생보 및 손보업계 총부채 및 보험료수입 통계에 대입하면,</p> <p>* (현행) 생손보 : 총부채가중치 70%, 보험료수입 가중치 30%</p>

	<p>기타업권 : 면제</p> <p>(23년) 생손보 : 총부채가중치 60%, 보험료수입 가중치 40% 법인보험대리점 : 영업수익가중치 100%(총영업수익의 50%만 반영)</p> <p>(24년) 생손보 : 총부채가중치 50%, 보험료수입 가중치 50% 법인보험대리점 : 영업수익가중치 100%(영업수익의 75%만 반영)</p> <p>(25년 이후) 생손보 : 총부채가중치 50%, 보험료수입 가중치 50% 법인보험대리점 : 영업수익가중치 100%(영업수익 전액 반영)</p> <p>- 생보업계의 감독분담금 부담액은 현행과 비교해 '23년에 약 45억원, '24년에 약 69억원, '25년 이후 약 73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p>																														
근거설명	<p>&lt;참고 : 연도별 보험영역 분담금 배분구조 변경 추정치&gt;</p> <table><tr><th>구분</th><th>현행</th><th>'23년</th><th>'24년</th><th>'25년</th></tr><tr><td>생보</td><td>540</td><td>495(△45)</td><td>471(△69)</td><td>467(△73)</td></tr><tr><td>손보</td><td>260</td><td>268(+8)</td><td>286(+26)</td><td>284(+24)</td></tr><tr><td>법인보험대리점</td><td>0</td><td>11.9(+11.9)</td><td>17.8(+17.8)</td><td>23.8(+25)</td></tr><tr><td>기타</td><td>0</td><td>1.0(+1)</td><td>1.0(+1)</td><td>1.0(+1)</td></tr><tr><td>합계*</td><td>800</td><td>776(△24)</td><td>776(△24)</td><td>776(△24)</td></tr></table> <p>* 분담금 환급기준 개선에 따른 보험영역 앞 추가환급효과 24억원 반영</p>	구분	현행	'23년	'24년	'25년	생보	540	495(△45)	471(△69)	467(△73)	손보	260	268(+8)	286(+26)	284(+24)	법인보험대리점	0	11.9(+11.9)	17.8(+17.8)	23.8(+25)	기타	0	1.0(+1)	1.0(+1)	1.0(+1)	합계*	800	776(△24)	776(△24)	776(△24)
구분	현행	'23년	'24년	'25년																											
생보	540	495(△45)	471(△69)	467(△73)																											
손보	260	268(+8)	286(+26)	284(+24)																											
법인보험대리점	0	11.9(+11.9)	17.8(+17.8)	23.8(+25)																											
기타	0	1.0(+1)	1.0(+1)	1.0(+1)																											
합계*	800	776(△24)	776(△24)	776(△24)																											

(정량)세분류	증권업계(투자매매, 투자중개, 종합금융, 단기금융, 자금중개회사)
활동제목	감독분담금 부담액 감소
편익항목	행정부담 감소
비용	47,315,812,09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도별 감독분담금 부담액 감소 추정액(6530000000)
근거설명	<p>① (금투영역 전체 감독분담금 부담액 축소) 권역 간 감독분담금 부담기준 개편* 및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에 따라 금투권역 전체의 감독분담금 부담액이 570억원에서 512억원 수준으로 약 △58억원 감소</p> <p>* 권역별 금감원 투입인력 가중치가 종전 60%에서 80%로 증가하고, 영업수익 가중치가 40%에서 20%로 감소</p> <p>**금감원 결산시 수지차액 중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환급비중이 증가 →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전체적으로 실질부담액 감소(시행령 개정 추진사항)</p> <p>② (금투영역 내)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영업수익 단일 기준 분담</p>

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분담금 부담액이 소폭 증가(7.6억→15.9억) → 반대급부로 증권사의 부담액 감소

⇒ 상기 2개 효과를 종합한 증권업계의 연간 감독분담금 감소 규모는 약 65.3억원으로 추정됨

<금투업계 감독분담금 납부기준 개선에 따른 업권별 예상효과>

구 분		현행(20년부과액)		개선		증감
<b>금융투자</b>		<b>570</b>	<b>20.4%</b>	<b>512</b>	<b>19.0%</b>	<b>△58</b>
기 존	증권(전업 투자매매·중개, 중금, 자금중개, 비은행지주)	530.9	19.0%	<b>465.6</b>	17.3%	△65.3
	자산운용, 일임·자문	7.6	0.3%	<b>15.9</b>	0.6%	+8.3
	전업신탁	4.6	0.2%	<b>4.1</b>	0.2%	△0.5
	신평 채평	0.5	0.0%	<b>0.4</b>	0.0%	△0.1
	자본시장유관기관(거래소, 중금, 예탁원 등)	26.4	1.0%	<b>25.6</b>	0.9%	△0.8
신 규	클라우드펀딩	-	0.0%	<b>0.01</b>	0.0%	+0.01
	펀드평가, 일반사무관리	-	0.0%	<b>0.02</b>	0.0%	+0.02
	REITS, 선박투자회사	-	-	<b>0</b>	0.0%	0
	PEF	-	-	<b>0.04</b>	0.0%	+0.04

(정량)세분류	은행 및 은행금융지주회사
활동제목	감독분담금 부담액 감소
편의항목	행정부담 감소
비용	21,737,739,092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연도별 감독분담금 부담액 감소 추정치(30000000000)
근거설명	<p>① (은행·비은행권역 감독분담금 부담액 감소) 권역 간 감독분담금 부담기준 개편* 및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에 따라 은행·비은행 권역 전체의 감독분담금 부담액이 1418억원에서 1407억원 수준으로 약 △11억원 감소</p> <p>* 권역별 금감원 투입인력 가중치가 종전 60%에서 80%로 증가하고, 영업수익 가중치가 40%에서 20%로 감소 → 감독분담금 약 +38억원 증가 효과</p> <p>**금감원 결산시 수지차액 중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환급비중이 증가 → 감독분담금 약 △49억원 감소 효과 (시행령 개정 추진사항)</p> <p>② (은행·비은행 권역 내) 종전에 분담금이 면제되었던 전금·</p>

VAN·겸영여신·P2P업자 등에 대하여 상시감독분담금 신설  
→ 반대급부로 은행 등 기존 부담업권의 부담액 감소

⇒ 상기 2개 효과를 종합한 은행권의 연간 감독분담금 감소규모는 약 30억원으로 추정됨

<은행·비은행권 감독분담금 납부기준 개선에 따른 업권별 예상효과>

구 분		현행(20년 부과액)		개선		증감
은행·비은행		1,418	50.9%	1,407	52.2%	△11
기 존	은행, 은행지주	1,202.5	43.1%	1,172.5	43.5%	△30.0
	여신전문	112.4	4.0%	109.6	4.1%	△2.8
	저축은행	35.7	1.3%	34.8	1.3%	△0.9
	상호금융(중앙회)	65.1	2.3%	63.4	2.4%	△1.7
	신용정보	0.6	0.0%	0.5	0.0%	△0.1
	주금공, 자산관리공사	2.0	0.1%	1.9	0.1%	△0.1
	근로복지공단, 무보	-	-	0.02 <sup>1)</sup>	0.0%	+0.02
	전금·VAN·겸영여신·P2P·신정원	-	-	23.3	0.9%	+23.3
신 규	소액해외송금업자	-	-	0.02 <sup>2)</sup>	0.0%	+0.02
	상호금융단위조합	-	-	0.54 <sup>3)</sup>	0.0%	+0.5